

# 근시

정범진 |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통상적으로 정책은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나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기정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기(適期) 정책은 없다. 정책은 어떤 시기를 상징하고 이때의 환경적인 여건과 우리의 희망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의 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람직한 상태로 진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나날이 대처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정책은 신속한 효과를 보기 위해 수립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좋은 정책도 반드시 장기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도, 그날 저녁에 자기가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최선과 그날 이후에도 얼마간 살아있을 것으로 보고 사는 최선은 틀림없이 다를 것이다.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판단에는 항상 함정이 따른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저가 수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이게 국민당 500원꼴이라면 누가 부담을 거절하겠는가? 하지만 그런 산업이 수백 개여서 이제는 그 부담이 수십만 원이라면 부담을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묶어서 전체로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

흔히 우리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건설 관련 규제를 풀어서 건설 경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정책이 부동산 투기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은 굳이 언론에서 똑똑한 기자들이 떠들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체질 개선이라는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정책에 전력 투구하다가 당장 숨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악적인 정책이었을 뿐이다.

책입의 무게를 더 느끼는 쪽은 선불리 원론적인 주장을 실행하는 것이 곤란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서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원시적인 정책이 단기적이고 근시적인 정책보다 항상 우월하고 우선해야 할 이유도 없다. 장기적인 정책과 단기적인 정책 그리고 현재의 대응은 주어진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균형적으로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 부문의 분위기는 단기적인 정책이 주도하는 듯 하다. 장기적인 정책을 표방하는 경우에도 미래의 환경 여건보다 현재의 현실적인 여건이 더 많이 고려되는 인상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듯 하다.

국제원자력파트너십(GNEP)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핵개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국가들이 과연 이 제도가 조기에 시행되었다면 핵개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역지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는 핵의 확산 방지를 표방하였지만 원자력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단기적인 산업 정책에 불과하다.

이 역시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선진 몇 개국의 지분을 늘려줄지언정 원자력 시장의 규모를 기울 수 있는 정책은 분명히 아니다. 어느 나라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요국가로만 남아서 이윤을 빨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니 말이다.

원자력 부문에는 단기 정책이 많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지도자가 단기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멀리 볼 능력이 없어도 그럴 것이다. 너무도 욕심이 많거나 미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익 집단 때문에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멀리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방사성폐기물과 같은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해서 '그때쯤엔 은퇴할 텐데' 라는 말로 피해가려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런 경우일 것이다. 누구나 내일 죽어도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부문에 이러한 근시적인 정책이 난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근시적인 정책에 우리도 근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우리는 원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근시적인 전투에서 맞서다가 힘센 적에게 분사하기보다는 시야가 좁은 적의 배후를 치는 것이 좋은 정책일 수도 있을 것이다. 